

성폭력 피해자 두번 울린 ‘둔감한 법원’

가해자에 유죄판결문 보내면서 피해자 주민번호·주소 기재

광주지법 목포지원 배상명령 처리 규정 경직되게 적용 물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민보다 규정만 따르는 경직된 자세로 대처, 지나치게 ‘둔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7일 성폭력 피해자 A(여·25)씨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제공,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죄판결문을 보내면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한 A씨의 이름·주소·주민등록

번호까지 포함해 발송,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민변측 입장이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하고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 판결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유죄판결문에 포함시키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예규’ 등을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인인 A씨의 인적사항과 신청 결과물 기재했다.

법원은 관련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배상명령 신청인을 명확히 밝히려려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작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원이 ‘무신경’하게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의 경우 가해자에게 제공된 유죄판결문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신변의 안전뿐 아니라 보복·협박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민변 측은 덧붙였다.

민변은 이 같은 점을 내세워 소송촉진법 조항에 따른 위헌심판 제청

■ 할당할 일 왜?

법원 판결문 작성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인한테 피해자 인적사항 상세 기재

■ 피해자는

정보 고스란히 노출돼 불안 광주·전남 민변 도움받아 국가 상대 손해소송 청구

■ 법원의 변은

소송촉진법 등 근거로 처리 신청인 명확히 밝히려려던 인적사항 기재할 수 밖에 없어



법원

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아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

■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라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할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관계소홀 부부의 끔찍한 결말

채팅으로 바람난 남편 살해 아내 영장

50대 여성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을 살해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인터넷 채팅과 야한 동영상에 빠져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여·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A원룸 안에서 수면제를 탄 막걸리·주여탕을 남편 김모(51)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방안에 번개탄 4장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와 사생활 관계로 10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김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방에 CCTV를 설치해왔는데, 다른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

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김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다운 받은 뒤 음란한 행위를 자주 해왔는데도, 지난 8개월 간 원만한 부부 생활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수 차례 제지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을 한 것 같다는 신고전화를 접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애초 “동반자 살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홍경기자 golee@

37억 보조금 도둑들

광양 파프리카 재배단지 공사업자·농민 무더기 적발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공사업자와 농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검사 민기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광양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농민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 주면서도 실제 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제출해 광양시로부터 37억여원을 편취한 공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사업자인 농민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자부담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에서 깎아 주거나 보조금을 받은 후에 주기로 이면약정을 하고서도 마치 실제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입금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광양시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농민에게 자부담 비용을 주고 농민은 이를 다시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해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수법, 농민이 일단 시공업체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해 통장사본을 제출한 뒤 시공업체가 다시 자부담금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밖에 입건된 B씨 등 2명은 농민이 아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다른 농민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신청한 뒤 2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증가시켜 예산 낭비를 부른 사례”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봄비... 퇴비주기 바쁜 매화농민
봄기운이 완연한 17일, 담양군 대덕면 매화농원에서 농장 주인이 매화나무에 퇴비를 주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최고 9.5mm의 축축한 봄비가 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절도 공구 직접 만들어 상습 빈집털이

광주동부경찰, 4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손수 제작한 공구를 이용,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광주 동구 게임동의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26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금품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건설 현장 공구인 노루발 뿔뿔, 속칭 ‘뽕뿔’을 직접 개조해 빈집을 털어 왔다.

조사결과 박씨는 100kg이 넘는 거구의 몸집을 이용, 아파트 현관문을 불과 수분 만에 부수고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

박씨는 훔친 귀금속이 진품인지 관별해 장물처분하기 위해 금 갈벌액과 다이아몬드 판별기를 직접 구매 이용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서울대 세계대학 평가 44위

400위내 국내대학 7곳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하는 2013~2014년도 대학 평가 순위에서 44위를 기록했다.

또 서울대를 포함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400위권 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기관 IDP에듀케이션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계대학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THE는 1971년 설립됐으며 매년 세계대학의 교육여건, 국제평판, 산

학협력 수입, 연구규모, 논문 인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대학 랭킹 400위’를 발표하고 있다.

THE에 따르면 전년 59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5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해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카이스트는 전년보다 12계단 상승한 56위를, 포항공대는 10계단 떨어져 60위를 기록했으며 연세대는 전년보다 7계단 하락한 190위를 차지했다. 또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201~225위 내, 한양대는 350~400위권 내 자리 매김했다. 전체 1위는 전년에 이어 올 해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차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 시내버스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와이파이’

오늘부터 이용 가능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시내버스에서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로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그간 시내버스에 설치된 와이파이기는 SKT에서 구축한 장비로 SKT 통신사 가입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사(KT, LGT) 가입자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광주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초까지 SKT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해 시내버스에서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SKT 가입자는 T Wifi zone에 접속하면 되고, KT나 LGT 가입자는 일일 1회 T Wifi zone에 접속 후 이동통신사, 연명대,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 및 맵핑 종류를 입력하면 된다. /연합뉴스

유주운전 단속 경찰에 들롱난 불법체류 캄보디아인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온 30대 불법체류자가 유주단속 중인 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들롱나 추방될 처지.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신 O(34)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처평동 유

덕IC 하행선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유주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던 것.

○~당시 유주 단속에 나선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한국말을 못한다며 거부하더니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였다”며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31371	1	북구 운암동 1101-1 나산아파트 101동 8층	아파트		164,000,000	164,000,000	
[아파트]							
2013타경 30057	1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17-4 1196㎡ [분묘수전 기소재, 분묘기 지권성립여지있음]			16,744,000	16,7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7-104 557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견전 사방가제외[이동가능, 매각제외]]			104,289,900	104,289,900	분묘소재, 분묘기 지권성립여지있음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30828	1	동구 불로동 106-6 59.5㎡ [공유차이영희지대 분 14분의3전부, 조인규지대 분 14분의 2전부]			29,772,450	29,772,450	일괄매각, 임차인 있음, 공유자우선 매수권행사제한
		동소 106-6 1층43.8㎡ [목책1과지분분할]	근린시설				

● 최고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기대수신인고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하며, 매각이 종료되는 날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4. 2.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4. 9.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인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대수신인고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기대수신인고와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증정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면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특별감면증명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한 날부터 속속하여 처리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할경우에도 불구하고, 제3차 또는 대항책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매수인도에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등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년 후인 특별정기소멸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사방 지동선상 등을 위한 정지인기 및 기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일반인등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7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열람서, 현황조사서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의(신청)과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매각대금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봉투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거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인고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한 중매계약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3차 제3차 제3차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법원공고 -> 법원매각정보서비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재판관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공판결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을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1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특별감면증명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한 날부터 속속하여 처리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할경우에도 불구하고, 제3차 또는 대항책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매수인도에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등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2년 후인 특별정기소멸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사방 지동선상 등을 위한 정지인기 및 기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일반인등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7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열람서, 현황조사서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의(신청)과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매각대금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봉투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거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신인고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한 중매계약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3차 제3차 제3차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법원공고 -> 법원매각정보서비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재판관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공판결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을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1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